“안전성 없는 한빛원전 3호기

가동 전면 중단하라”

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위 ·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

“안전성에 문제 없다는 것은 규제기관 책무 저버린 행위”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19일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 3호기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19일 “안전성 없는 한빛 원전 3호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원 7명과 전북연대 회원들은 이날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빛원전 3.4호기는 국내 원전 공극(구멍)의 약 80%(264개소), 철근 노출부의 약 48%(208개소)를 차지할 만큼 균열 등 안전에 취약점을 드러내 오랜 기간 정비하다가 지난 14일 2년 6개월 만에 재가동됐다”며 “격납건물의 균열은 원전 안전에 있어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최후 방호벽인 격납건물의 안전이 미확보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그리스 누유부의 미세틈새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콘크리트 균열을 예상할 수 있으며,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실험에서 보듯 격납건물에 압력이 가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보수부위)부터 균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격납건물의 전체적인 전수조사 없이 누유 부분에 대한 점검만을 실시하고, 공극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것만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점은, 원전 운영에 있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야 할 규제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빛원전의 설계.감리를 담당했던 한국전력기술, 한수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프라마톰社와 콘크리트학회에 평가와 검증을 맡기게 된 순간부터 한빛 3호기 재가동의 불행은 예정돼 있었다”고 지적하고 “총체적 부실로 진행된 한빛 3호기의 평가와 검증으로 인한 재가동의 위험부담은 원전 인근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과거, 짝퉁부품 사용, 1호기 수동정지 사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극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창·부안군 주민은 위험만을 감당해 왔다”며 “한빛원전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재원 지원이 전무함에도 정부는 별도의 대책 마련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의회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들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3호기의 운행을 강행해 고창·부안군 주민과 전북도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려는 원안위와 한수원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한빛원전 3호기 운행의 전면 중단과 재전수 조사, 관련 내용 공개, 방재예산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남원 · 임실 관광루트 개발을’

전북도의회 건축자산 보전 · 활용 연구회 최종보고회서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대표의원 이병도)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건축자산 가치확산을 위한 지역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완료된 ‘전북도 한옥 건축자산 관리.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용역에 이어 연구회에서 정책연구 목적으로 수행한 두 번째 용역이다.

특히, 전북도 건축자산의 가치를 도민 전체가 공감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을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원 및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원광대학교 박연정 교수(건축학과)와 연구진이 참석했으며, 최종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 교수는 ▲건축자산 및 관광자원화 사례조사 ▲전북도 건축자산 현황조사 및 관광자원 후보군 선정기준 제시 ▲건축자산 지역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마련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남원시, 임실군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루트 개발, 관광지도 제작 등 실제 건축자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병도 대표의원은 “건축자산 가치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부족해 지역의 소중한 건축자산이 훼손되거나 방치돼 있어 우선 도민들이 건축자산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을 제고·확산시키고,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전북도 건축자산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지역의 관광콘텐츠로 개발.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및 제도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는 이병도, 나인권, 김대오, 정호윤, 이한기, 이정린, 조동용, 최영일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9일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개별적 정책 대응을 위해 약 40여 차례 일부개정이 반복됨으로써 법 전체적 체계성이 약화 됐다.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 ▲청소년 정책, 활동, 복지, 보호 등 용어 정의 ▲청소년 인권 존중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점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 ▲청소년전문가 양성과 자질 향상 시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공사 품질 높이는 주민감독제 반드시 시행해야”

이광환 무주군의원 “부실공사 줄이고 주민 만족도 높여”

군, 행감서 지적 수용 ‘공감대’ 내년부터 제도 적극 운영

무주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의 여러 건설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살피는 주민감독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주군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수용하고 주민감독제의 효과에 대해 공감해 내년부터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감독제는 무주관내 여러 마을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보다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대개 마을 이장이나 개발위원장들이 주민감독으로 참여해 설계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나 공사에서의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효율적 의견을 개진한다. 공사과정에서는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제도의 운용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광환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18일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들이 마을에 공사하는 것은 알아도 주민감독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제도는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고 낭비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몇몇 공사가 이뤄진 곳을 확인해봤는데 주민감독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광환 의원은 “건설업체에 불편을 주고 공무원을 피곤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공무원에게는 감시의 눈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업체로서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니 보수나 재시공을 안 해도 된다. 주민은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니 만족도가 좋다”며 주민감독제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과장은 이 같은 질의에 “부실공사도 예방하면서 사업목표도 달성하도록 주민감독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시행할지는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무주군은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주민감독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석대로 시공해 품질 높은 공사를 완성하고 조례의 실효성도 살린다면 주민 편익이 크게 증진되고 불만민원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 국가 · 지자체 지원

민주 한병도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법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명확한 지원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과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병도 의원은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최영심 도의원 “소상공 위한 공공생활앱 ‘뒷걸음’” 지적

전북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도는 공공배달앱에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관심이 줄어들자 지지부진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역형 공공생활앱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월부터였고,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도민이 원활하기 위해 5월부터 지속해서 소상공인 등과 접촉하며 방향성을 논의해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최해 지난달 21일에 열린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 관련 간담회’에서만 해도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이를 번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생활앱 정책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은 지난 8월 발간된 이슈브리핑을 통해 광역형 공공생활앱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면서 “연구를 맡은 기관이 공공생활앱의 긍정적 효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전북도는 뒷짐 지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면서 공공생활앱에 대한 이런 태도는 사실상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결정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고 다중적 의미를 담은 말로 소상공인을 속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관용차량 구입시 사용환경 분석 철저히”

유송열 무주군의원, 행감서

무주군에서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 용도와 사용환경을 확실히 분석하지 않아 구입한 지 3년 1개월 만에 매각하는 일이 발생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무주군은 관용차량 사용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해 예산이 사장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관용차량 구입 전 이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유송열 의원은 19일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이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사업을 위해 구입한 운송용 트레일러를 2016년 8월에 구입해 2019년 9월에 매각한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차량을 3년 1개월 만에 매각한 것은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정에 맞지 않는다. 당시에는 필요해서 구입했을 텐데 구입해놓고 사용환경에 안 맞으니까 내구연한이 4년이나 남았는데도 매각했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당시 영화상영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다니기 위해 트레일러를 구입했다. 하지만 일부 마을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경사도 심해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기 위험해지자 사용을 중단했고 온비드 경매로 매각했다.

유 의원은 “개인재산이라면 결코 3년 만에 2,300만원을 손해 보며 차량을 매각하지 못할 것이다. 차량구입 당시 판단을 잘못해 예산이 낭비된 사례다. 무주군의 관용차량이 100대가 넘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 재무과장은 “구입 당시 산골마을 진·출입로 등 통행환경을 고려했다면 트레일러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적을 수용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마을방송, 재난방송시스템과 호환 안돼” | 남원시의회, 시민소통실 행감서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지난 18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초 신설된 청년정책에서 도시재생과 공동체지원센터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소통하고 관주도 사업방식에서 탈피,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실에 대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교육 강화를 촉구하고,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문제점을 사전 예방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시민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마을방송이 재난방송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가능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할 것과 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의 철저를 주문하고, 화장품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원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위한 획기적 방안 강구와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적정성을 지적하고, 기업후견인 제도 운영에 소규모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를 요구했다.

끝으로 농정과를 향해 농민공익수당과 공익형직불제 사업에 누락되는 농민들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와 미 신청자 구제방안을 거론하고, 남원참미 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여 농민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용호 의원 발의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 본회의 통과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이 대표발의한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재해보험 보상률 등 약관 변경 시 보험가입자인 농어민들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이번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심의회가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어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유호상 기자